해경은 '부실수사'… 업체는 '안전불감증'

작년 9월 대평포구서 스쿠버다이빙 체험 40대 숨져
해경 "내사종결"→ 유족 반발에 '업무상 과실치사'
처리 늦어지는 사이 같은 업체에서 40대 女 또 사망

제주해경의 부실수사로 인해 해양사망사고에 대한 피의자 처벌이 늦어지는 사이 해당 피의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9월 8일 오후 1시4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 앞 500m 해상에서 수중 스쿠터(DPV)를 이용해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던 이모(당시 45·제주)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스쿠버 강사이자 업체 대표인 강모(38)씨와 레저보트 운전자 1명, 이씨를 포함해 제주와 경기도에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러 온 일반인 7명 등 총 9명이 있었다.

이씨는 평소 제주 모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스쿠버다이빙 강좌를 이수하면서 해당 강좌의 강사였던 강씨를 알게됐고, 사고 당일에도 강씨와 2인1조로 물 속에 들어가는 '짝잠수'를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에서 강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이씨가 수심 3m 지점에서 수면 위로 올라가겠다는 수신호를 한 뒤 SMB(부력이 있는 부표)를 이용해 상승했다"며 "이후 수면 위로 올라가보니 이씨가 엎드린 채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호흡기가 입에서 이탈돼 순간 해수를 흡입, 패닉상태에 빠져 부력 장치를 조절하지 못해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 사망 원인을 내놓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수사를 맡은 서귀포해양경찰서도 강씨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해 지난해 12월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문제는 이씨의 유족들이 올해 1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비롯됐다. 비교적 얕은 수심인 3m 지점에서 익사가 가능하냐는 것과 당시 이씨를 처음으로 발견한 일반인 다이버(경기도)와 강씨의 진술 시각이 엇갈리는 등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강씨가 '짝과 항상 함께 행동하고, 짝과 헤어지면 즉시 상승해야 한다'는 해경의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재수사 결과 강씨는 5명 이상이 스쿠버다이빙을 할 경우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씨가 상승하겠다는 수신호를 보냈음에도 곧바로 올라가지 않아 안전의무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측이 제기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강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강씨는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이어갔고, 또 다시 사망사고를 냈다. 사고 9개월 만인 올해 6월 8일 오후 3시쯤 이씨가 사고를 당한 곳과 인접한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 남동쪽 500m 해상에서 지모(49·여·경기)씨와 짝잠수에 나섰다가 지씨가 사망한 것이다. 해경이 수사만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은 이 사고에 대해 강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두 사건 모두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경 관계자는 "이씨의 사고 당시에는 강씨가 무등록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할수 없었다"며 "1차 수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본 뒤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교육감 취임 1주년 여론조사 '도마 위'

제주도교육청 국정감사
제주고 야구부 해체 다뤄
전교조 전임자 휴직 쟁점

국회 교육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사진)에서 최근 불거졌던 제주고 야구부 해체 논란을 도마에 올렸다. 이석문 교육감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교육청이 진행한 도민 대상 여론조사를 두고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5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임재훈(바른미래당) 의원은 해체 위기에 놓였다 유지 결정이 내려진 제주고 야구부 문제를 거론하며 이석문 교육감의 입장을 물었다. 이 교육감은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 야구부 운영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지만 재학생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이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도민 여론조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앞서 도교육청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제주교육 현안과 정책, 교육감 업무수행 평가' 등을 조사하고 지난 6~7월에 걸쳐 발표한 바 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의원은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유독 제주만 예산 1600만원을 들여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육감 공약인) IB 교육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긍정 유도 질문은 물론 이석문 교육감에 대한 질문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이 교육감은 "교육정책에 대해 도민에게 물어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박 의원은 "응답자 절반이 60대이고, 이념성향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며 내용상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이 2015~2017년 교육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도내 특정호텔에서 49건의 행사를 열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산 것을 언급하며 "최근 국민권익위가 입법예고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됐다면 고위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에 해당될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이해 충돌은 당사자의 의도가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라는 표현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제주도 감사위 지적 사항에 대해 수용하고 문제되는 부분을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교조 전임자 휴직 논란도 쟁점이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으로 교육부는 2013년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전임자 휴직허가 취소와 복귀, 교육청이 전교조 시도지부에 지원한 사무실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행정조치를 담은 공문을 내려 보냈다"며 "그러나 제주를 비롯한 4개 교육청(광주시·전라남도·전라북도) 모두 노조 전임자 불법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은기자

급식대란 일단 피했다
학교비정규직 파업 유보

제주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달 17~18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각급 학교의 '급식·돌봄대란'을 피하게 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이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하면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15일 청와대 인근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과 큰 틀에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계획돼 있던 총파업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임금인상 미적용 직종의 보충교섭 진행, 근속수당 인상(2019년 3만4000원·2020년 3만5000원)을 비롯해 내년 8월 말까지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두는 것이다.

하지만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이 여전해 갈등의 불씨는 남게 됐다. 학비연대는 "사측이 내놓은 잠정합의서 세부 문구는 시간제 피해 대책이 없고, 잠정합의 성과를 축소하고 보충교섭을 제한하는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정 요구에 귀 기울여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성산일출봉과 갯쑥부쟁이 15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해안에 갯쑥부쟁이가 활짝 피어 가을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음란물 유포 20대
법원 "벌금 700만원"

제주에서 음란물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후 3시27분쯤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9월 25일까지 총 539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유포한 음란물 중에는 30대 일반인 여성이 나오는 동영상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데이트폭력 피해신고 3년새 5배 ⬆

2016년 118건→ 작년 638건
23명 구속… 폭행·상해 최다

연인 사이 발생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뜻하는 '데이트폭력'이 제주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6년 109명, 2017년 100명, 2018년 12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40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워 구속된 경우는 2016년 5명, 2017년 9명, 2018년 9명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는 2016년 118건, 2017년 199건, 2018년 638건으로 증가폭이 컸으며, 범죄 유형은 폭행·상해가 6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이 101건으로 뒤를 이었다. 살인(미수 포함)과 성폭력도 3건 있었다.

경찰은 과거 연인 사이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됐던 데이트폭력이 최근 사회적 인식 변화로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보복범죄가 두려워 제주경찰이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시행한 경우도 2016년 93건에서 2017년 129건, 2018년 13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은범기자